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국장

## “소비자 관점에서 이용자 편의 극대화되도록 통신정책 추진할 것”

글 손해웅 중앙일보 산업부 기자 hysohn@joongang.co.kr

지난해 9월, 예상치 못한 미래창조과학부의 ‘파격 인사’에 과학기술계와 정보통신기술(ICT)계가 술렁였다. 당시 과학기술정책국 김주한 국장과 통신정책국 이동형 국장의 자리를 맞바꾸는 인사를 낸 것이다. 각각 옛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핵심 보직이다. 과학기술과 ICT 분야는 흔히 마라톤과 100m 달리기로 비유된다. 호흡이 길어야 하는 과학기술 정책과 순발력 있는 대처가 필요한 ICT 정책의 특성을 빚댄 말이다. 성격이 워낙 판이한데다 각자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기대감과 걱정이 함께 교차했다. 그 후 1년, 당시 파격 인사의 주인공인 통신정책국 김주한 국장을 만나 그간의 달라진 점과 그가 맡고 있는 한국 통신정책의 미래를 물었다.

경상북도 경주 출신의 김 국장은 한양대(전기공학 학사)·영국 맨체스터대(과학기술정책 석사)를 졸업하고, 1985년 기술고시 2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주로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 공직생활을 해온 그는 이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 중 한명이다. 이하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Q. 미래부 출범 이후 첫 과기·ICT 교차인사 케이스였다.**

**A.** 지난해 9월 통신정책국장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영국으로 유학가던 기억이 떠올랐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보직변경이 국내에서의 이사라면 ICT 분야로 보직을 옮기는 것은 해외로의 이사와 같은 큰 변화였다. 유학 갈 때처럼 모든 것을 거의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다. 비록 1990년대 초

·중반 ICT 분야에서 4년간 근무경험이 있기는 했지만, 기술 진보가 빠른 IT 분야에서 20년 전의 경험은 별 도움이 안됐다. 게다가 전보하자마자 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등 통신정책 관련 이슈가 정치적으로 다뤄져 상당히 고전했다.

**Q. 벌써 1년이 지났다. 소회를 말해 달라.**

**A.** 이제는 통신정책에 상당히 익숙해졌다(웃음). 그러나 아직도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부족해 한계를 느낄 때가 많다.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전문지식과 최근 동향뿐만 아니라 과거 히스토리도 잘 알아야 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도 원활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세월이 쌓여야 얻을 수 있는 자산들이다.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내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한 단계 깊이 들어가면 한계를 느낄 때가 많다.

**Q.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미래부의 교차인사를 평가하자면?**

**A.** 어려운 질문이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단 외부에서 인력을 수혈하면 그간 쌓인 고질적인 병폐나 관행을 고치는 데 효율적이다. 시너지를 내고, 융합이나 경계면에서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교차인사는 과거의 소중한 노하우·경험을 사장시킨다는 단점에서 해당 분야에는 마이너스다. 이런 측면에서 교차인사는 꼭 필요한 직위에 한해, 그것도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든다.

**Q. 통신정책국에서 펼치고 있는 주요 정책이나 이슈는 무엇인가?**

**A.** 간단히 말하면 이동통신·전화와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어 있어 관심도가 높다. 대표적인 게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이다.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중간 정도이지만 통신 소비량이 아주 많고, 단말기 가격도 비싸고, 자주 교체하기 때문에 가계통신비 지출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가입비 및 서비스 요금 인하, 요금제 선택권 확대,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비용부담 완화, 소비자의 합리적 통신소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계통신비 부담경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정상화'도 빼놓을 수 없다. 이동전화 단말기의 경우 같은 가격이 판매점, 구입시점 등에 따라 20만~8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됐다. 오는 10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된다. 이 밖에 '스마트폰 부정사용 방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등도 주요 이슈다.

**Q. 한국의 통신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A.** 국내 유무선 통신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유선의 경우 전송속도 기준으로 세계 최고이며, 향후에도 기기인터넷 상용화를 통해 한국의 유선통신은 계속 세계 최고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선의 경우에도 2011년 LTE 출시, 2013년 LTE-A 및 광대역 LTE, 2014년 광대역 LTE-A 서비스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전송속도가 최대 225Mbps 수준까지 향상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3밴드 광대역 LTE-A 서비스 출시로 전송속도가 최대 300Mbps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5G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면 유선인터넷과 같은 1Gbps의 전송속도도 가능하다. 무선 역시 세계 최고라고 평가할 수 있다.

**Q. 앞으로 한국 통신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나.**

**A.** 기간통신시장은 가입자가 거의 포화되어 성장이 정체돼 있다. 따라서 정부·통신사업자·제조사·이용자 등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성장이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ICT 생태계 측면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부가통신과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 생태계 내의 갈등과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환경에서 통신사업자는 기존 시장 내에서 가입자 빼앗기를 통한 현상 유지 전략에서 벗어나, 사물인터넷·빅데이터·클라우드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장

점이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해 융합서비스 개발 등에 힘써야 한다.

**Q. 앞으로 펼칠 통신정책의 방향은?**

**A.** 새로 부임한 최양희 장관은 모든 정책이 소비자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외부에서 바라볼 때 그동안의 정부 정책이 정부와 사업자 시각에서 수립·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통신정책도 수요자와 소비자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이용자 편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간통신사업자 중심에서 ICT 생태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반 구축, ALL-IP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통신요금 인가제 및 진입제도 개선 등 통신시장 경쟁경쟁기반 강화, 이용자에 대한 정보 개방 및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의 통신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앞으로 나타날 통신시장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중장기 통신정책방향을 마련 중이다. 연말쯤 발표할 예정인데, 한 번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매년 수립·보완하여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Q.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최근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 어떻게 보는가?**

**A.** 단말기 보조금은 이용자의 고가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시장 창출, 기술 발전 등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은 단말기 과소비와 자원 낭비,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간 차별, 가입자 간 비용 전가 등 소비자 후생을 왜곡한다. 또 통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역기능이 더 많다. 보조금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이유다. 소비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보조금을 받는다고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보조금은 결국 소비자가 내는 요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조금만큼 우리가 통신요금을 더 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Q. '통신요금 인가제'도 뜨거운 감자인데.**

**A.** 과거 통신사업이 정부 독점에서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반경쟁적 요금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 해당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의견이 다양하고,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선불리 어떤 개선안이 좋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통신요금 인가제 문제는 변화하는 통신환경 하에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향,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정책 추진이라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